

'97식품정책방향

이 상 기 /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장

최근 우리의 식품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 여건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각종 공해와 농약·중금속오염등 식품위해요인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WTO체제의 출범으로 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수입식품이 급증하고 있고,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그 어느때보다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에도 푸짐한 상차림을 선호하는 음식문화는 여전하여 음식물쓰레기가 전체 생활쓰레기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이로 인한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가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지난해 정부는 국민의 식품안전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고 새로운 대내·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식품·의약품의 안전관리를 전담할 식품의약품안전본부를 설립하였고 11월에는 음식문화개선운동본부를 발족시켜 「좋은식단」 정착 및 음식문화개선운동을 추진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식품안전관리체계의 정착 및 기초식품의 안전성 확보, 식품위해기준의 국제화 지속 추진, 수입식품관리체도의 합리적 개선, 식품산업의 지원·육성, 「좋은식단」 정착 및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 등을 '97년 식품정책의 기조로 삼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1. 식품안전관리체계의 정착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본부와 6개 지방청이 설립됨으로써 식품위생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기틀은 어느정도 마련하였으나 아직도 식품안전관리체계가 완전히 정착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금년에는 식품의약품안전본부가 식품의 원료에서부터 제조·가공, 유통·판매, 소비자보호에 이르기까지 식품안전관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즉, 식품안전성검사를 안전본부 중심으로 체계화하고 농·수·축산물의 안전성검사를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강화하는 한편, 안전본부 및 지방청에도 행정처분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식품안전관리를 효율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식품사범은 엄벌에 처하고 고의·상습사범은 언론에 공표하는등 처벌을 대폭 강화할 것이다.

또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검사능력에 대한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검사업무에 대한 정도관리결과가 일정수준이상인 기관에 한하여 공인검사기관으로 인정하며, 자가품질검사기관의 검사능력 보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영업자가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위해요소를 분석·중점관리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제도는 지난해 식육제품에 이어 올해에는 어육제품, '98년에는 유제품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량식품에 대해서는 영업자 스스로 전량 회수·폐기토록 하는 식품회수(Recall)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며,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명예식품위생감시원 위촉을 대폭 확대하여 국민에 의한 사회적 감시체계를 강화할 것이다. 또 건강보조식품, 다이어트식품광고에 대하여 사전심의를 실시하여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도록 할 것이다.

2. 식품위해기준의 국제화 지속 추진

지난해 아세트콜로르등 61종의 농약잔류기준을 추가로 설정함으로써 농약과 항생물질의 잔류허용기준은 CODEX등 선진국 수준에 대체적으로 접근하게 되었다. 금년에는 중금속, PCBs등 환경오염물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확대하고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을 선진국수준과 조화되도록 조정하는 한편, 다양한 재료의 발달에 따른 신개발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기준 및 규격도 정립해 나갈 것이다.

또한, 부패·변질되기 쉬운 김밥, 도시락 등을 제외한 과자류등 64개품목의 유통기한을 자율화하고, 유통과정상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냉동·냉장유통체계를 구축하는 등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다.

3. 기초식품의 안전성확보

콩나물, 간장, 고추장, 참기름 등 국민이 일상적으로 먹는 다소비식품은 다른 어떤 식품보다도 안전이 요구된다.

정부는 농약을 사용한 콩나물 판매, 병든 고추를 섞어 고추가루를 제조·판매하는 등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를 철저히 막기 위하여 식품감시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식품의 원료가 되는 농·수·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림부, 해양수산부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

여 출하전 안전지도 및 안전성검사를 강화하고 유통시장의 농·수·축산물 수거·검사를 강화하도록 할 것이다.

4. 수입식품관리제도의 합리적 개선

지난해부터 수입식품 신고시 지정된 외국 공인검사기관의 검사증명서나 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밀검사에 갈음하거나 일부 항목을 검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수입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현재는 미국 오레곤주 수출서비스센터 한 곳만이 지정되어 있다. 앞으로 외국검사기관에 대한 공인검사기관 지정을 확대하여 수입식품검사절차를 간소화하고 지방청의 업무부담을 줄여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수입식품의 위해물질정보, 과거 위반사례 등 광범위한 정보를 D/B화하여 위해발생가능성에 대한 자동검색체계를 구축하는 등 수입식품검사업무 전산화작업을 마무리 할 것이다.

아울러 식품위해정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정기간행물, 인터넷등 정보통신망을 이용, 각종 자료를 D/B화하여 정보를 축적하고, 선진국의 최신 식품위해정보를 신속히 입수하기 위하여 미국, 일본, EU등과 정보교류체널을 구축하는 방안을 협의할 것이다.

5. 식품산업의 지원·육성

정부는 그간 식품위생관련업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식품산업의 진흥업무를 올해 중점 과제중 하나로 선정,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세계에 있어서는 수입식품 원료의 역관세 및 전반적인 고율관세문제를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해결하고, 식품산업관련 기자재나 연구개발용시설·장비에 대한 관세의 인하를 추진할 것이다. 품목별 수출추이를 예측하여 각국 국민의 기호, 식생활등을 고려한 수출전략을 수립하고, 미국, 일본등 선진국 시장에서 한국식품전시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유통구조의 개선은 산업발달은 물론 식품

안전의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냉동·냉장유통(Cold Chain)체계 구축을 위한 시설개·보수자금 및 장비도입비를 지원하며, 수송·하역·보관등 유통단계별 자동화, 재고관리의 정보화도 병행 추진할 것이다. 식품유통에 사용되는 각종 기구 및 설비의 표준규격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냉장·냉동식품 유통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할 것이다.

6. 「좋은식단」 정착 및 음식문화개선 운동 추진

작년 11월 발족한 「음식문화개선운동본부」를 중심으로 「좋은식단」 보급·확대를 지

속적으로 추진하고 참여대상업소를 전국의 43만여개의 모든 일반음식점으로 확대할 것이다.

좋은식단을 적극 실천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지원하고, 수도료감면등의 혜택을 주는 한편, 음식물쓰레기 다량 배출업소에 대하여는 시·도, 지방청에서 상반기중에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앞으로 「좋은식단」 실천수기 공모, 자작 메뉴 컨테스트등을 실시하여 민간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하이텔, 천리안등 주요 통신망과 인터넷을 활용, 새로운 매체에 익숙한 젊은 세대의 참여를 유도할 것이다.